

KBIZ 중소기업연구소
정책브리프

Vol 32 | 2022. 12월

Contents

- I. 대내외 경제현황 1
- II. 중소기업 정책연구 2
 -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방향

세계 경제
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.2% 내년은 2.7%로 전망
 - 23년 성장률은 올해 1월 3.8%로 예측했으나 연초보다 1.1%p 낮아진 2.7%로, 2001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 추이
 - 수십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재정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, 美 상반기 GDP 축소, 하반기 유로 지역 위축,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코로나 봉쇄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영향을 반영
 -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'22년 8.8%, '23년 6.5%, '24년 4.1%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
- 세계무역기구(WTO)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고금리 정책 등으로 내년 세계 무역 성장률을 1%로 전망



국내 경제

- 한국은행은 금년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2.6%, 1.7%로, OECD는 각각 2.7%와 1.8%로 전망
 - '23년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로, 상반기는 주요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나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 해소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(한국은행)
 - 방역조치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는 펜트업 모멘텀이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이끌었으나 최근의 고금리, 공공요금, 소비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이후 7개월째 기준점인 100을 하회
 - 가계와 기업 대출 상환부담 가중으로 인한 주택가격 조정, 기업부실 위험 등이 소비와 투자 제약
 - '22년 수출 6,900억\$(전년비 +7.1%), 수입 7,350억\$(+19.5%), 무역수지 450억\$ 적자 예상 (한국무역협회)
 - 코로나 이후 미중 갈등 지속과 러·우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, 공급망 재편 가속 등으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져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할 전망
 - '23년 성장의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, 내수는 1%p 대 중반 수준, 수출은 상당폭 축소된 0.3%p 전망



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방향(1/6)

KBIZ중소기업연구소 박승찬 부부장

중소기업의 가치와 보호·육성의 필요성

■ 중소기업의 가치

■ 중소기업의 비중

- 2020년 말 기준,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729만개 사 (전체 기업의 99.9%), 종사자는 1,754만 명(전체 기업의 81.3%), 매출액은 2,673조(전체 기업의 47.2%)
- 중소기업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이며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고용능력과 생산능력, 부가가치 효과는 경시될 수 없음

■ 중소기업의 역할

- **일자리 창출의 원천** : 국민 총고용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. 특히 창업과 신생기업은 국가 전체의 고용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
- **혁신의 동력** : 창업은 전체 시장에서 혁신과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은 산업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산업의 경쟁력이며 국가경제 성장의 원천
- **사회안전망 제공** :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
- **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** : 경제구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보호·육성하는 것은 다수에게 적절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

〈 중소기업의 역할기능 〉

구분	경제적 기능	정치사회적 기능
직접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자리 제공 및 창출 - 생산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-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안전망 제공 · 소득을 통한 보편적 복지 · 소수, 취약계층 창업과 기업 활동의 기회 제공
간접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의 창의·혁신과 자유 실현 · 다양한 창업기회 제공 · 다양한 기업은 시장의 혁신과 성장 견인 -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 ·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 · 가치(공급)사슬과 생태계를 형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 ·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· 국민의 삶의 질 제고 - 국가 지역 균형 발전 · 지방기업 활성화 및 지방경제 발전 통한 자치분권 실현

■ 중소기업 지원의 정당성

■ 헌법상 경제민주화

♣ 헌법 제119조 ♣

-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.
-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,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

- 헌법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지도원칙으로 표명
-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, 적정한 소득 분배, 시장지배력 및 경제력 남용 방지,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등 경제영역에서 국가 목표 명시적 언급

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방향(2/6)

- 경제민주화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공정사회(fair society)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

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·육성

♣ 헌법 제123조 ♣

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- 헌법 제123조 제3항 ‘중소기업 보호·육성’은 헌법 제119조 제2항 ‘경제민주화’를 구체화한 조항
- 중소기업은 생산과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사회적 분업과 기업 간 경쟁 촉진 등 국민경제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‘중소기업의 보호’를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표로 명문화하였음.
- 또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경쟁에서 불리함을 조정하고, 균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

■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

♣ 공정거래법 ♣

- 제116조(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)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18조(일정한 조합의 행위)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대기업 등이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진입하거나 중소기업과 경쟁하게 되면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존권 위협받게 됨

- 또한 소규모 사업자와 소비자는 대기업에 비해 교섭력이 열악하여 상호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음
-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16조와 제118조는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가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하고, 시장내 공정(fair)하고 자유(free)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또는 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배제 명시

II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사례

■ 미국의 ‘활력있는 다수(the Vital Majority)’ 정책

- 미국은 중소기업을 시장의 독점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 발현을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, 발전을 이끄는 원천으로 간주
- ‘활력있는 다수’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자유시장 제에서 역동성과 혁신을 높이고 국민 다수에게 삶의 안정성과 만족을 얻도록 해주는 정책을 상징한 개념
 - * 활력있는 다수(the vital majority)라는 개념은 미국 중소기업청의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책 제목을 통해 1973년 처음 제시
- 미국 중소기업청(SBA)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음(SBA, 2022)
-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대부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추진함

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방향(3/6)

■ 독일의 '미텔슈탄트(Mittelstand)' 정책

- 독일 연방정부는 경쟁시장의 형성과 미텔슈탄트의 육성을 사회적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핵심으로 인식
 - 미텔슈탄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발전시키는 전제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주력
 - * 미텔슈탄트는 '중산층'이란 어원을 갖는 말로 자영업자, 가족경영 기업,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개념
-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텔슈탄트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, 디지털화에 따른 역량 부족,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개혁, 관료주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(2015)
- 미텔슈탄트 육성 10대 실천계획 제시(2015)
 - ① 기업가정신 장려, ② 신생기업의 자금 접근과 성장 강화, ③ 역량 부족 해소, ④ 관료주의 축소와 좋은 규제환경 조성, ⑤ 디지털화 실현과 활용
 - ⑥ 혁신역량 강화, ⑦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, ⑧ 유럽 중소기업정책 적극 수용, ⑨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, ⑩ 에너지 분야에서 신시장 발전 지원
- 또한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가치사슬 네트워크화로 요약되는 인더스트리 4.0 정책 적극 추진중. 미래 변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인더스트리 4.0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

■ 일본의 중소기업 현장

- 2010년 발표한 '중소기업 현장'에서 중소기업을 일본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고 사회의 주역이며, 국가의 재산이라고 규정

- **현장의 제정 이유**는 자금과 인력에 대한 제약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외부 변화에 취약하며, 불공정 거래관행 등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경향과 가치가 중소기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
- **정부가 중소기업 정책 추진시 준수해야 할 5대 기본원칙 제시(2010)**
 - ① 중소기업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② 창업을 촉진하며, ③ 중소기업이 창의성과 재능을 갖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하도록 장려하며
 - ④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, ⑤ 중소기업의 부담을 없애는 사회안전망 제공을 제시
- **8대 행동지침(2010)**
 - 첫째,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 지원을 개선하고 철저하게 추진한다.
 - 둘째, 중소기업이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을 지원한다.
 - 셋째, 창업과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.
 - 넷째,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.
 - 다섯째,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정비한다.
 - 여섯째,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촉진한다.
 - 일곱째, 중소기업이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는 시스템을 조성한다.
 - 여덟째,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평가에 중소기업 목소리를 반영한다.

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방향(4/6)

III 대전환기의 정책 전환

-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 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'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 것'을 천명함
 -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▲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▲공정거래법 집행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▲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▲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▲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근절 및 대·중소기업 성장 확산 등을 제시함
 -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전환을 천명
 - 숲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·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,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'중소기업 생산성특별법'을 제정하는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
-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도 새로운 흐름에 맞는 변화가 요구됨. 대·중소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간 상생협력, 공정,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사업 생태계가 변창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함
 - 상생협력
 - 상생협력은 국민경제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신뢰형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·발전하기 위한 '사회적 자본'이기도 함
 - 따라서 상생협력은 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모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의미임
 - 4차 산업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
 - 공정
 -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는 사회적 배분과 관련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평등 해소,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경제력 남용방지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
 - 공정성은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으로 구분되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경제생태계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함
 - 자율과 경쟁
 - 자율과 경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으로 기업생태계에서 혁신을 촉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함
 - 기업생태계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함

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방향(5/6)

IV 중소기업 정책 방향

※ 이하 내용은 본회 지원으로 이재은 순천대학교 교수가 실시한 중소기업 보호·육성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방향 연구 결과 요약임

- 2020년~2022년 기간 중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지원 정책과 정부가 실시한 지원정책(‘기업마당’과 ‘중소벤처24’)간의 전략적 적합성(strategy fit)을 확인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실시한 결과,

- 중소기업계는 주로 경영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정책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

*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위한 분석자료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·국회 등에 건의한 ‘정책건의백서’, ‘중소기업계 제언 과제요약집’ 활용

■ 양극화 심화

- (정부정책) 혁신성장, 동반성장 등이 주요 키워드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역량강화에 초점

- (중소기업 건의) 기술보호, 기술탈취, 불공정거래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어 대기업과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 개선에 더 관심

⇒ 기술탈취 방지,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(하도급법, 중소기업기술보호법)

- (정부정책) 위기극복과 경영난이 키워드

- (중소기업 건의) 낙찰하한율, 표준화,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주로 확인됨

⇒ 조달 관련 적정가격 보장위한 낙찰제 방법 개선, 납품단가연동제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

■ 플랫폼 경제

- (정부정책) OTT플랫폼, 라이브커머스, 메타버스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플랫폼 활용 관련 키워드가 많음

- (중소기업 건의) 수수료, 광고료, 협상력 등

⇒ 중소기업이 온라인플랫폼기업과 불합리한 거래조건 해소 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 등 부여(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)

■ 디지털 전환

- (정부정책) 스마트공장, ICT, 인공지능 등이 키워드
- (중소기업 건의) 스마트공장, 디지털전문가, 전담인력 등이 주로 확인됨

⇒ 중소기업에 디지털 전문인력 취업 지원,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마련

■ ESG, 탄소중립 본격화

- (정부정책) 공급망, 위험대응, 환경오염, 일터혁신 등이 키워드
- (중소기업 건의) ESG, 탄소중립, 지속가능경영 등이 주로 확인됨

⇒ EU 공급망 실사지침,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, ESG 역량 강화 지원

- (정부정책) 일터혁신, 지역주도형 일자리 등이 키워드
- (중소기업 건의) 근로여건 개선, 안전,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주로 확인됨

⇒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산재예방 위한 지원,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개선 필요

■ 세계화·지역화

- (정부정책) 판로개척, 물류애로, 수출통합플랫폼 등
- (중소기업 건의) 新통상환경, 뿌리산업, 물류애로, 시장조사 등이 주로 확인됨

⇒ 글로벌 공급망 붕괴,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, 맞춤형 해외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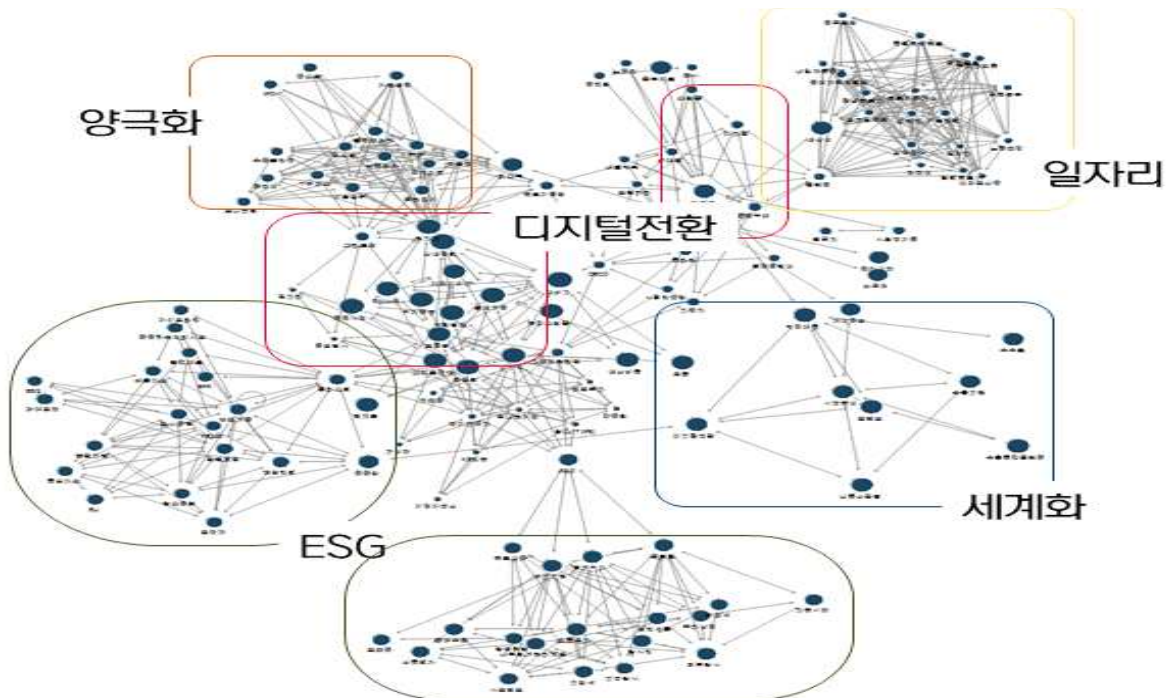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과 정책방향(6/6)

■ 인구구조 변화

- (정부정책) 미래인재, 고용유지, 일터혁신, 인건비 등
 - (중소기업 건의) 기술인력, 근로여건개선, 주52시간제, 인력난 등이 주로 확인됨

 ⇒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작업환경 등 일터혁신,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완화나 근로여건 개선을 우선 요구

〈중소기업 정책건의 중심성 분석결과 시각화〉



〈 주요 클러스터별 키워드 상위 10개〉

구분	양극화	플랫폼	디지털전환	ESG	세계화	일자리
1	납품단가	플랫폼	스마트공장	환경오염	시장분석	청년근로자
2	기술탈취	쇼핑몰	디지털전환	배출가스	수출지원	유연근무
3	징벌적	비대면	전담인력	ESG	신통상환경	탄력근무
4	리스크	종합쇼핑몰	ICT	과대포장	수출통합플랫폼	근로기준개선
5	규제	T-커머스	신성장	RE100	수출보조금	실업급여
6	공정거래	홈쇼핑	기술인력	녹색제품	바우처	고용유지
7	협상력	플랫폼기업	혁신성장	온실가스	-	안정성
8	후려치기	-	모빌리티	EU	-	실업자
9	공정성	-	제조업	탄소중립	-	성과보상금
10	수급불안정	-	생산성	플라스틱	-	내일채움공제

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.

- 연구주제 제안
-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(이력서)
-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

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
kbizlab@kbiz.or.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